

2野, 광주·전남의회 의장단선거 혈투 예고

광주시의회, 더민주 조오섭·김영남 vs 국민의당 이은방 전남도의회, 이용재 vs 임명규...양당체제 속 결과 주목

제20대 총선과 함께 지방의회가 일당독점에서 벗어나 더민주와 국민의당간 양당체제가 구축되면서 이달말과 다음달 초로 예정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후보의 의장단 선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회=제7대 광주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는 3파전으로 압축된 모양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치러지는 하반기 의장 선거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 2)·김영남(서구 3) 의원과 국민의당 이은방(북구 6)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에서 일찌감치 이 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다수가 불발에 올랐던 더민주에서도 후보가 두 명으로 압축됐다.

광주시의회 정당 분포는 더민주 13명, 국민의당 8명, 무소속 1명으로 더민주가 과반이지만, 표가 분산되면 당선을 장담

하기 어려워 당내 두 후보 간 단일화가 예상된다. 이는 한쪽의 양보보다는 당내 경선으로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더민주의 지난 총선에서 광주 8석을 모두 국민의당에 내줘 시의회 의장직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장선거는 소속정당 외 의원 간 친소나 지역구 협력 관계가 작용할 여지도 있어 단일화를 한다 해도 국민의당 이 의원과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최종 후보 결정이 안 된 탓에 후보 등록 등 일정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인입' 구성논의도 아직 물밑에 있다. 지난 1일 개최한 회기가 끝나는 오는 13일 이후 단일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 선거 구성은 다음달 8~22일 임시회에서 이뤄진다.

◇전남도의회=제10대 전남도의회 하



조오섭 의원 김영남 의원 이은방 의원 이용재 의원 임명규 의원

반기 의장단 선거 대결 구도 역시 확정됐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전남도의회 하반기 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이용재(광양 1) 의원과 국민의당 임명규(보성 2) 의원이 출마한다. 이용재 의원은 러닝메이트인 더민주 송형곤(고흥 1), 국민의당 강성휘(목포 1) 의원이 제1, 2 부의장 후보로 나선다.

임명규 의원의 러닝메이트는 국민의당 권욱(목포 2), 국민의당 서정환(여수 3) 의원이 제1, 2 부의장 후보로 출마한다. 의장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대결인 가운데 부의장은 강성휘 의원이 이용재 의원과 한 조가 돼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일부 혼재됐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경쟁 구도로 치러지면 일단 더민주가 일단 유리한 형국이다. 도의회는 더민주 33명, 국민의당 22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이번 의장단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당 대결 속에 의원 간 친소관계 등도 반영될 것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 진영이 상임위원장(7명) 후보들과 어떻게 짝짓기를 하느냐에 따라 의장단 선거 결과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 등록은 21일까지며, 28일 의장단·상임위원장 선거를 한다. 29일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새누리 “복당 문제, 원구성 후 논의”

비대위 전체회의...전대 개최 시기는 못정해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이하 혁신비대위)는 7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탈당 의원들의 복당 문제는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결정하지 못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원 구성 마무리 전에는 복당은 없다’고 발표했었다”면서 “혁신비대위도 원구성 마무리 뒤에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원 구성 타결 전 복당을 허용할 경우 원내 제1당의 지위를 회복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고 동시에 내부 논의를 거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 대변인은 전대 개최 시기에 대해

“8월초, 9월초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실무 준비와 혁신안이 이뤄지는 과정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비대위는 2개 분과(정당·정치, 경제·민생)로 나눠 당 지도부 개편, 공천 제도, 청년·여성 안전 등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혁신비대위는 조만간 신안에서 발생한 학부형의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현장을 방문, 오지 근무 교사의 안전을 비롯한 처우 대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혁신비대위 운영과 관련, “앞으로 정치의 눈이 아니라 국민의 눈에 맞는 혁신을 해야 한다”면서 “정치 선행에 개이지 않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부, 폐기 법안 197건 입법 재추진

노동법 등 쟁점법안 제외

법제처는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정부 제출 법안 가운데 197건의 입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등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쟁점 법안은 새누리당이 발의하기로 해 정부의 재추진 법안에서는 빠졌다.

재추진하는 법안을 소관 부처별로 분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각각 22건,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각각 18건, 법무부 17건, 국가보훈처 13건, 국토교통부 12건, 교육부 10건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무조정실은 규제비용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성과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과 수입인지 판매자 준수사항 관련 내용을 담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을 다시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동성폭력법·상습성폭력법·연쇄살인법 등에 대해서는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수용해 사회복귀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 보호수용법안과 변호사 시험 성적공개 청구의 근거를 마련한 변호사시험법을 재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장애훈육촉진 및 직업재활법,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근로기준법을 다시 추진한다. 한편, 정부 제출법안의 19대 국회 처리율은 74.2%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사회 양극화 제대로 된 해법 찾자”

‘불평등 어떻게 해결하나’ 토론회...대책 필요성 공감대

‘금수저·흙수저론’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나섰다.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가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는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참석, 축사를 통해 소득 및 부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건을 언급한 뒤 “서울 메트로의 정년 퇴직자를 전동차 안전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로 옮겨 한 달에 440만 원을 받았다”며 “반면 비정규직 청년은 월 140만 원을 받아, 조선시대 양반·상인보다 더 심한 수탈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생태계, 일자리 생태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도 “정치권이 경제세력의 막대한 영향을 받아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정부도 자본의 힘에 역눌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포용적 성장의 조건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진보와 보수를 떠나 건전한 해답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축사에서 “남

녀·지역·교육·정규직·비정규직 격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 분야의 격차가 다른 분야 격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 고리로 서로 얽힌 복잡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는 보수정당부터 진보정당 후보까지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균형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경제민주화는 공허한 말장치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참석, “상대적으로 진보 정부인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적극적 분배·복지 정책을 폈으나 외환위기 여파로 성장률이 낮아 진보정권에 기대되는 수준의 분배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낙수효과 이론’(대기업이 성장하면 성장세가 하위 계층에게도 흘러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론) 가설 등으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됐고, 박근혜 정부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약수하는 유승민·정진석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오른쪽)가 7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 토론회에서 축사를 한 뒤 무소속 유승민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분요건 10%로 강화”

김동철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재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상장, 비상장회사 모두 10%로 대폭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분요건을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분매각과 합병 등을 통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회피하는 가 하면 규제 대상이 아닌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경쟁 기회조차 빼앗는 등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라며 “세금 없는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 축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오픈

Self MG 서양새마을금고

모집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문의 | (062) 720-2872